

과학기술 대중화운동

과학기술의 뒷받침없이는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푸는 해법도 과학기술분야에서
찾아야한다. 국력을 총동원해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을
전개하여 경제를 회생시킨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 전국민의 과학화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대중화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해야 하겠다.

대한 관심유도는 우수한 인력을 과학기술분야에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배경아래 영국 과학기술청이 공식적으로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지난 94년부터이며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과학기술 대중화를 이끄는 기관은 로열소사이어티의 과학기술이해사업 위원회, 영국과학진흥협회, 영국왕립협회 등이며 개스비(Gatsby) 웰컴 트리스트(Wellcome Trust) 등 자선재단과 기업, 대학, 각종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과학기술이해사업의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과학기술 대중화에 앞장서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명쾌했다. 즉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을 통해 유능한 과학기술 청소년이 육성되면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기업을 키우는 인재가 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대중화의 열매를 자기네 기업들이 따먹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배경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영국의 과학기술 대중화 운동은 장기 침체로 허덕이는 영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은 실로 다양했다. 과학진흥협회가 매년 가을 1주일간 개최하는 과학축제를 비롯 과학주간행사, 크리스마스 과학기술강연, 과학강연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학 대중화사업 공로상, 과학도서상, 과학이해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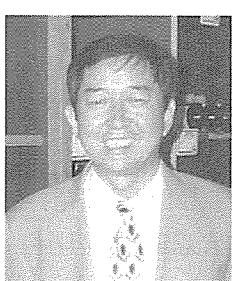
필자는 얼마 전 7박 8일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 선진국을 방문해 각국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과학기술 대중화 노력을 살필 기회가 있었다.

이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이 오늘날 영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과학기술은 경제회생 지름길

영국 정부는 지난 93년 「잠재력의 인식-과학기술전략」이라는 표제의 과학기술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영국의 기울어진 경제를 되살리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아래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을 하나의 정책목표로 채택했다. 특히 청소년의 과학기술부문에



李柱鎬

〈매일경제신문사 과학기술부장〉

방실험실 운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세미나 등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다.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자의 언론이해워크숍, 과학기술자의 언론기관내 수습파견, 과학기술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기법 안내책자 발간, 과학기술자의 국회 파견, 여성의 과학기술계 참여 장려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도 청소년 과학클럽(BAYS) 운영, 청소년 과학작문상, 저명 과학자와 학교의 연계, 중학교 교사와 과학자의 연계 등 다채로웠다. 함께 둘러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이 생활 전반에 어떤 변화를 미치고 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대중화사업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펼치고 있었다.

특히 이들 3개 선진국에서 둘러본 과학박물관(Science Museum)의 시설은 ‘과학기술이 바로 우리 생활’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로 홀륭했다. 눈을 둘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의 꿈도 과학기술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목청들을 둑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푸는 해법도 과학기술분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나 주장들이 언제부터인지 진부하게 느껴지기만 한다. 말의 성찬에 비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주자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집권하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에 두겠다고 호언한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 비추어 과연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리가 염원하는 21세기 초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의 꿈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국력동원 과학기술 대중화운동을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끓고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치인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공약을 흐지부지 넘길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 것도 아마 사회적으로 만연된 과학기술 경시분위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대중화운동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학으로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해 매년 각종 과학행사를 통해 국민의 과학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科總,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유관단체들도 과학기술 홍보 및 계몽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기구나 시민단체에 의해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소규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처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대중화 운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높아가는 선진국의 기술 보호장벽 앞에서 우리 기업의 활로는 독자적인 과학기술력의 확충밖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앞으로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장학과 복지사업 위주의 사회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학대중화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科總 등 과학 유관단체에서는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 과학기술풍토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독일의 사이언스 뮤지엄이나 미국의 스미소니언같은 과학기술 홍보관의 설립을 추진,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의 이미지를 심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뒷받침없이는 더 이상 나라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전국민의 과학화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주고 이는 또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대중화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들이 발전전략의 핵심을 과학기술에 두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강건너 불로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ST)**